

2008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강 민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장

1. 머리말

지방세정의 영원한 과제는 납세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평 · 합리세정 운영을 통한 신뢰 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국민들의 납세협력에 따른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편의세정 · 전자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도 지방세정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운영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과표제도의 합리적 개선, 선진 지방세 관리기법 개발 · 보급 등 지방세 세원관리 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는 한편,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등 지방세수를 꾸준히 확충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정운영에도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의식 신장, 경제 · 사회구조의 복잡 다기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IT기술 등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조직 · 인력의 리모델링 추진, 앞서가는 디지털 지방세정 구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방세수 확충 및 관리 강화

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지방세정의 기본적인 임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수 모교를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책정한 '08년도 당초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43조 5,48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0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 38조 732억원 보다는 14.4% 늘어난 5조 4,752억원이 증가하였지만, '07년도 지방세 세입결산 전망액 43조 4,400억원에 비해서는 불과 0.2%(1,08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불투명 등 금년도 지방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경기변동 등 지방자치단체별 세수여건을 면밀하게 분석, 합리적인 세수목표를 설정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 정리,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화 등을 통해 세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분기별로 1회이상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세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수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전국단위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도 상·하반기별로 개최하여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새로운 체납액 정리기법 개발·보급

정보화 등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체납액 정리기법을 개발·보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세수확충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재산세 DB, 각종 회원권 정보 등 전국단위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방안을 개발·보급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상이한 체납차량에 대한 DB를 구축·보급함으로써 대포차 등에 대한 체납액 정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체납정리실무기획단 운영을 통해 체납액 정리 우수기법을 발굴·보급하는 한편, 우수 사례집도 발간·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다. 지방세 품질관리제도 도입

유권해석 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및 면책성 과세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세징운영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국민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과세편의주의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증가로 사회적 비용 및 해당 납세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과세 원인규명, 근본적 대책 수립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도입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민원은 과세전 자문절차를 경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단위에 「지방세 과세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과세 발생시 업무처리기관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지방세를 부실과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라. 효율적인 세징운영을 위한 고품질 통계관리

지방세 통계는 매년 발간하는 지방세정연감을 통해 지방세 세목별, 지방자치단체별 부과·징수 실적 등을 중심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정확한 세수추계 등 효율적 세징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효율적 세징운영을 위한 통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중에 지방세 통계 기초 자료인 지방세 세표체계 등 기존의 불합리한 통계자료 집계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한 중장기 세수전망기법 모형 개발, 세수격차 지수 등 지방세 정책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가칭 「지방세 정책통계 보고서」발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 재산세의 안정적 운영

재산세의 경우 '07년말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용 토지, 부설 주차장용 토지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뀌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등 많은 제도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금년부터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이 50%에서 55%로 조정되는

등 주택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이 달라지게 되며,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이 종전의 신고납부 방식에서 부과 고지방식으로 바뀌는 등 많은 제도가 금년부터 변경되어 시행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도 변경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정비 하는 것은 물론 사망자 ·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등 변동자료를 빠짐없이 정비하여 과세DB가 정확하게 구축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년도 재산세제를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04년말에 개편된 재산세제가 안정적으로 정착,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세 세원관리 기반 구축

가. 지방세 과표제도의 합리적 운영

일반 건축물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상권이 위축된 일부 상가 등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거래시가보다 높아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표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리적인 과표운영이 필요하다.

먼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아 불합리한 때에는 취득세 · 등록세의 경우 금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도 금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일반건물 과표 자체 조정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하여 납세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 과표에 비해 현실화 수준이 현저히 낮아 금년도에 과표가 상향 조정된 기타물건 과표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 소유자에게 과표 현실화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홍보하여 안정적으로 과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세 과표체계 개선 연구 지원

보유세 강화 및 부동산 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되는 등 시가체계의 과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같은 부동산중 일반 건물 과표의 경우 원가방식으로 과표가 산정되고 있어 시가와 괴리되는 등 지방세 과표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

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방세 과표제도 개선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작년 말에 발주하여 금년도에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게 된다.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FTA 대비 국제평가기준에 맞는 과표 평가기준 법제화 방안, 구분 지상권 설정 등에 따라 지상·지하의 일부 공간에 대한 토지과표 산정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한 「토지과표 입체적 산정기준」마련 방안, 일반건물 과표 산정체계를 시가방식이나 임대수익방식 등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물과표 체계 개선, 차량 등 기타물건 과표체계 간소화 방안, 노인 등에 대한 과표 감산 방안 및 지방세 과표 불복청구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심층 전문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과표 개선팀」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용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연구성과가 도출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진 지방세 관리기법 개발 보급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직·인력의 한계로 과세자료 정비,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세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법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간 과세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효율적인 세원관리기법 개발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자부에서 이미 보급한 「지방세 전산감사·조사기법 편람」을 활용한 체계적 세원관리기법이 확산되도록 하고, 법인 세무조사 실무 활용자료로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편람」을 작성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배당금(한국자산관리공사) 배분 전 압류처분 방안, 법인 과점주주 현황(국세청) 및 전국 사업장별 종업원 현황 DB 등 유관기관 과세정보를 활용한 지방세 세입 확보방안 등 지방세 세수증대 및 세원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선진 지방세 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라.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추진

지방세 세무조사에 있어 세무조사 결과 과세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있어 납세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세권자 위주의 무리한 과세로 납세자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 선례 등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검토보다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유도하는 등 면책성 업무처리 사례 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과세예고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필요시 과세관청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세무문제 사전 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활용한 사전적 문제해결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세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경우 과세예고 전에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 관련자료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사전 심의제 운영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와 심도있는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줄이도록 여러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광역단위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 세무조사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지방 세무조직 · 인력의 리모델링 추진

가. 지자체 세무조직 · 인력 표준모형 개발 보급

지방세 세수규모 및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경제 · 사회 전반의 전문화 · 복잡 다기화 · IT기술의 눈부신 발전 등 지방세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 세무조직 · 인력은 오히려 인력 규모가 축소되는 등 이러한 여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의 세무조직 · 인력은 세무행정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직 ·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세무직을 충원하여 세무직 인사 적체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조직 · 인력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표준이 되는 시 · 군 · 구의 조직 · 인력을 근간으로 하여 적정 세무조직 · 인력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 가능한 모형이 개발되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연구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지방 세무조직 · 인력 표준모형을 토대로 현재 세목별 또는 기능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조직 · 인력 운영체계를 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세무조직 · 인력체계로 개편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지방공무원법령개정」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전문성 · 책임성 제고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 직렬을 신설하거나 지방세무공무원의 보직경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세 무직 인사운영체계도 개선대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나. 세무공무원 직무 전문역량 강화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대국민 세정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고자 한다. 교육수요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방세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 운영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 등 민간(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쟁력 있는 전문특화 교육과정은 아웃소싱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작년말에 창립된 「한국지방세 협회」를 전문특화 교육과정 운영단체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치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지방세 사이버 교육도 교육인원과 시간이 확대되도록 관련 교육기관과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운영 우수사례의 지속적 확산보급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이 함양되도록 전국 지방세정연찬회, 지방세정운영 전국 BP대회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업무 중 체득한 지방세정 우수사례의 발표·토의로 상호 벤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정리 우수사례, 세무조사 우수기법 등을 분기별로 발굴하여 WeTax 정보공유방에 게시하여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등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5. 앞서는 디지털 지방세정 구현

가. 표준시스템 확산보급 마무리 및 위택스 서비스 확대

납세자 만족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달랐던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시·군·구↔시·도↔행자부 및 유관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1단계 사업으로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이 개발('05.1~'06.3)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표준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07년 말까지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207개 시·군·구에 표준시스템 보급을 완료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방↔중앙을 연계하기 위한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06.1~12)도 마무리되어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시스템인 WeTax시스템이 구축되어 '07년 말까지 81개 시·군·구에서 전자신고·납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년에는 서울시 실정에 맞는 광역형 표준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표준시스템의 전국 확산 보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전략계획(ISP)을 마련 중에 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WeTax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메일서비스 기반의 전자고지 서비스, 전국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터넷 조회 서비스, 전자민원 G4C시스템과 연계한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세무 대행인(세무사 등)에 의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등 WeTax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10년까지 3개년 목표로 전자납부율 20% 달성을 목표로 납세자 만족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나. 지방세·국세 동시 납부체계 구축 및 세원정보 공유 확대

납세자 만족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소득세(국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지방세)를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WeTax↔시·군·구의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동시 납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매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국세 소득세와 동시 납부할 수 있도록 WeTax시스템 및 표준시스템을 금년 4월말까지 개선하여 금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부터 국세·지방세 동시 납부제를 시행하고, 앞으로 국세·지방세 동시 납부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원정보 공유기관↔위택스↔지방자치단체간 세원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청의 사업장별 변동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소유자 등 건축물 변동자료, 개별주택 공시가격 정보 등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전국 체납DB 실시간 구축 및 One-Stop 조회 서비스, 법원행정처 인터넷 온라인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One-Stop 등기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중앙↔지방간 온라인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여 세원정보의 실시간 전자적 공유를 통한 지방세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맺음말

금년도 지방세정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운영을 뒷받침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세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 세무조직·인력 표

준모형 개발 보급, 지방세 과표제도의 개선 발전방안 강구,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콘텐츠 확충 등 지방세정 발전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관리면에서는 부동산 경기 불투명 등 금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이 불확실하므로 체납액 정리, 탈루·은닉세원 발굴, 국세청·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세원정보 공유확대 등을 통하여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제들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내는 납세자 만족 공평·합리·신뢰세정이 구현되어야 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지방세정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 이룰 수 있는 어려운 과제들이라고 본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으며 금년 한 해에도 모든 지방세정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